

특별기고

우제길



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재정이나 경제력의 차이도 문제지만 문화공간의 확충과 미술관의 건립 지원 등을 다루는 국민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관심과 애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원인이 더 크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 전체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은 국·공·사립 모두 합쳐 850여 개이며, 이웃나라 일본은 5700여 개, 그리고 미국은 2만2000여 개나 된다.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배출해 낸 5천년 역사의 문화

이나 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연관했던 각 지역에 특색있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지방과 연관된 가장 특색 있는 흔적들과 함께 남아 있어 더욱 그 지방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간혹 이런 흔적을 찾아 지방을, 마을을 순례하는 인사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대로 된 개인 예술관이 나 미술관 등을 만나기보다는 토종 음식들을 즐기기나 잠시 스쳐가는 장소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가진 흔적들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개인 예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보이고 지원을 해줘 특색있고 풍부한 향토의 문화공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이곳저곳에 특색 있는 모양과 색채를 달린 공간이 이뤄지고, 외국으로의 여행보다 국내 지방 곳곳에 우리들의 다채롭고도 풍성한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시대가 됐다. 이와 같은 점성들이 한해가 저무는 문턱에서 가져보는 아쉬움이다.

(우제길미술관 관장)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흔히 나오는 요즈음이다. 실제로 선진 외국을 다녀보면 이들 나라가 단순히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생활 곳곳에 배어있는 문화의 힘에 있어서도 선진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선진 외국에서 문화의 힘은 대부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연장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훌륭한 작가나 예술가가 있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소양의 훈련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없고, 또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의 발달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조그마한 마을 단위에서도 10여 개 이상의 문화 공간, 작가의 집,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

관이 그 도시나 마을에 있느냐가 결국 그 도시와 마을의 수준과 삶의 풍요성을 상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그 도시나 마을의 특색이

민간예술관 방치하는 문화행정

살아나고, 조그마한 산간벽지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문화행사가 열리고 또 그것을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과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이는 결국 그 도시에 대한 애함과 자긍심을 살려주며 결국 중앙과 지방, 도시와 마을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특색을 가진 풍부한 삶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부터 문화를 숭상

민족임을 감안하면 참피한 노릇이다.

그나마 이러한 공간들은 대부분 중앙에 몰려 있고 국립, 공립, 혹은 대기업들의 지원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처음의 시작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이 살아나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개인 예술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등이 적극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과제 하우스, 세잔의 집들은 꼭 배울린

중고칼럼



서달원

허물어졌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어지는 제 답변이었습니다.

“뭐가 그래요? 안 예쁜 사람들은 안 예쁘더구만!” 아차! 싶었습니다. 안 예쁜 사람은 안 예쁘다니? 제 눈에 평소 애 안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안 예쁘게 바라봤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예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쁘지 않게 볼 뿐만 아니라 만나기 싫어서 가급적이면 피하려 했던 경우도, 싫어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이고 싶습디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 건강하든 병약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내세를 만들고, 인정받을만한 부분에 주목해 주기를, 사랑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라면서 나는 정작 어떻게 행동해 왔을까?

결과 속이 다른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눈여겨보고,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그렇지 못했었나 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새로움을 새로움으로 바라보고 맞이하기 위해서 눈에 익숙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

탄절은 바쁜 일상과 일에 지친 몸의 피로를 푸는 휴식의 시간이나,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에 자리를 함께하는 송년회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빠 사느라고 흑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뒷전에 놓지는 않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산간 아니었을까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나아가 그 중요한 사랑을 다짐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과 다짐으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홍윤숙 시인의 시(詩) ‘다시 성탄절에’가 운대 한 구절입니다.

“... 홀로 2천 년 전 그날대로 오시는 / 예수 / 어느 큰길 차도에 발 묶여 계신가 / 길 잃고 굶주려 울고 계신가 / 예루살렘! 예루살렘! / 너 어찌 나를 저버리는가 / 이 세상 광에서도 잊지 못하는 / 내 사랑 이리 아프게 하는가? / 물레 물레 숨어서 울고 계신가”

(고흥 소속도 성당 주임부)

기고



하상수

농지연금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정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업소득도 부족해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해결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제도적 보안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고흥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지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농지를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 현재 전국적으로 1000명이 농지연금에 가입, 월평균 96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최초 가입자는 올 1월 3일 약정 체결한 손우석·박순옥(영암군 영암읍 거주) 부부로 1억7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71만8000원의 연금을 10년간

받게 됐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손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았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가지고 가입을 결정하게 됐으며, 이웃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 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만큼 농지 연금은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70세인 농업인이 2억원

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 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속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제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 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나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화 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미 농업인 복지제도이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농지연금으로 생활 자금을 마련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암 지사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늘려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에 다니며 아기를 맡기고 싶은데 그런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다 보니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정답일까.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냥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세워진 보육시설은 3만3400여 개이고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아기의 숫자는 142만명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다니는 아이들은 113만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맡길 곳은 넘쳐는데 맡을 수가

없어서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보육을 원하는 엄마들이 바라는 믿고 맡길만한 시설은 민간시설이 아니라 국공립 시설을 뜻한다. 왜냐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값은 싸면서도 교사나 보육원의 질이 높고 시설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공립 보육 시설은 전체의 5.5% 뿐이라고 하니 예를 낳기도 전에 줄부터 선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고,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12만 명이라고 한다.

앞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끌어올려겠다는 생각을 접고 국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량으로 지어서 운영해야 한다. 왜 초중

고는 운영하면서 보육시설은 운영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다 큰 아이, 즉 자기 앞가림을 하고 질병에도 면역력이 생겨서 강한 아이를 맡기는 거야 웬만한 시설이면 수급을 하겠지만 이

제 막 태어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간판쟁이를 누구에게 맡기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 국가예산을 엉뚱한데 쓸게 아니라 이런 곳에 제대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양창숙·광주시 남구 구소통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첨단산업 2단계 준공 언제까지 미룰 텐가

광주에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한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산업단지 분양이 이미 완료됐지만 입주 및 증설을 원하는 업체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과 첨단 등 8개 산업의 공장용지 분양률이 100%에 달하면서 산업단지 곳곳에서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말 준공 예정이던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준공이 내년 8월 말로 또다시 연기된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세번째 연기인데다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년8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다.

첨단산업 2지구는 시행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시 북구 신용동·연계동 일원 206만1000㎡에 조성 중이며, 광산업·디지털정보기반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개발된다.

LH는 당초 사업시행기간을 2009년 12월 말로 잡았으나 2007년 공사 연장을 이유로 1년간 늦춘 뒤 2009년 다시 1년간 연장해 올해 말로 미뤘다가 지난

달 또다시 8개월 연기한 것이다.

LH측은 북구 비아변전소에서 연계동에 이르는 고압 송전탑 이설을 놓고 한전과 이견을 보여 사업이 늦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변방에 불과하다. 송전탑 이설은 이미 사업 시행 전에 예견된 문제인데도 이제 와서 이견 운운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세차레나 준공이 연기되면서 584만 1000㎡의 장기 임대 용지를 분양받은 39개 업체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해 생산 차질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업체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타지에 공장을 짓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는가.

LH는 한전과 송전탑 이설 문제를 합의한 만큼 서둘러 공사를 완료해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광주시도 LH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성화고 실습생에 초과 근무 강요하다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김모(18)군이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채 초과 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실습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공장 기숙사 앞에서 쓰러진 김군은 병원에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취업을 앞둔 터라 안타까움이 크다.

특성화고는 기업체 현장실습이 체계적인 실무능력을 익힐 수 있고, 취업에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고 3년생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다. 기업들도 이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은 물론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학교와 기업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허술한 관리·감독이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라도 하루 8시간, 주 46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김군은 하루 10.5시간, 주 52.5시간 근무하는 등 기준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한다. 회사가 기본급 기준으로 15~20%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처럼 잔업을 포함해 10시간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킨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회사도 학교측과 근로기준법 준수할 약속만 작성했을 뿐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교육당국과 노동청도 이런 위반에 대해 전혀 감독을 하지 않았다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광주·전남 76개 특성화고 3년생 6000여명이 수백개 기업에서 실습 중에 있어 김군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개연성은 상존해 있다.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은 부족 인력을 대체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현장실습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 당국의 실습생 근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연적인 일이다.

필연적인 일이다.

無等鼓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어렵지 사카린과 관련된 추억 한 두 가지는 있게 마련이다. 초등학생이던 1970년대의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산나개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마시던 미숫가루의 강렬한 단맛은 잊을 수 없다. 어머니는 소금같은 아한 결정체를 손가락으로 으깨 미숫가루에 타 주셨는데 바로 그게 사카린이었다.

사카린은 1878년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석탄 부산물 콜타르를 공부하던 학생 팔버그가 발견했다. 그는 손끝에서 단맛이 나자 실험실에서 만든 화합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팔버그와 지도 교수 램센박사는 논문 2편을 함께 발표했지만 팔버그는 혼자서 특허를 내고 패턴을 받았다.

사카린은 제자와도 평생 상종하지 않았다. 사카린은 세상에 첫 선을 보일 때부터 순탄치 않았던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5월 발생한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한국비료는 일본에서 건설자재로 위장해 사카린 2259포대(약 55t)를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김두한 의원

이 국회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인본을 투척한 사건도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달고 가격은 40분의 1 수준으로 인공감미료 중 가장 싸지만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된 후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젓갈·김치·절임식품과 일부 음료수를 제외한 모든 음식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카린이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을 계기로 지구촌에서 사카린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칼로리 화가 난 램센은 제자와도 평생 상종하지 않았다. 사카린은 세상에 첫 선을 보일 때부터 순탄치 않았던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5월 발생한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한국비료는 일본에서 건설자재로 위장해 사카린 2259포대(약 55t)를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김두한 의원

가 없어 많이 먹어도 비만 위험이 없다는 장점으로 부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식약청이 내린 초부터 소스·소주·추잉껌·토마토케첩 등 8개 식품에 대해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20년만 해 해금(解禁)되는 사카린이 대중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사카린의 부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광교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제작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